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 중간 발표회

일시 : 2022년 5월 30일(월) 15시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3층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 중간 발표회

▶ 일시 : 5월 30일(월) 15시

▶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3층

사회 : 이은주(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무처장)

발 표(각 20분)

5.3민주항쟁에 대한 일간지 기사문 분석

: 김창수(인하대 초빙교수)

인천5.3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
그리고 노동자대투쟁

: 이재성(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기록의 체계적인
아카이빙 방안

: 손동유(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5.3인천민주항쟁 참가단체들의 정치적 특성
-운동사적 맥락에서의 유인물 분석

: 윤영상(전 서울연구원 연구원)

종합토론(각 15분)

이우재(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영철(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문의 : 032)862-5353

목 차

[발표1]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일간지 기사문 분석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4
[발표2] 인천5.3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 그리고 노동자대투쟁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21
[발표3]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기록의 체계적인 아카이빙 방안 손동유 (아카이빙네트워크 연구원)		28
[발표4] 인천5.3민주항쟁 참가단체들의 정치적 특성 - 운동사적 맥락에서의 유인물 분석 윤영상 (신한대학교 객원 연구위원)		33
[종합토론1]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41
[종합토론2] 김영철 (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		43

발표1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일간지 기사문 분석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배경: 5.3민주항쟁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대응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들이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인천 시민회관사거리 일대에서 군 부독재 퇴진과 민주헌법 쟁취, 신군부 집권연장책인 이원집정제 비판, 노동3권의 보장 등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만여 명의 진압경찰과 맞서서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집회를 좌경적인 폭력집회로 몰아 민주화운동세력에 타격을 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보수야당을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과 분리하여, 안정적 정권 이양이 가능한 개헌안을 관철하려 했다. 이같은 목표는 인천5.3민주항쟁을 소요사태로 규정한 안기부의 이른바 ‘수사조정’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1986년 5월7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장은 경기도경찰국장, 인천지검장에 보낸 전언통신문 ‘5.3 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 자료를 보면, 인천 5.3민주항쟁을 ‘인천소요사태’라고 규정하고,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을 발본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데서 드러난다.¹⁾ 안기부는 ①사건 성격 규정 ② 사건 명칭 부여 ③ 구속자 결정 ④ 별도 수배자 요구 ⑤ 훈방자 결정 등 수사전반을 지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안기부가 도리어 검찰을 지휘하는 국기 문란이 공안정국 상황에서 일상화되고 있었음을 확인된 것이다.

○ 안기부

“5.3인천소요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좌경 성향 불순단체에 대하여 실상을 규명함에 있어 금번 당 관내에서 구속된 129명을 대상으로 추적 수사를 통해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기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등을 발본 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²⁾

경찰은 수사 초기 이 집회를 ‘5.3’ ‘5.3사건’³⁾ ‘5.3시위’⁴⁾ ‘5.3행사사건’ ‘5.3인천시위’⁵⁾ ‘5.3사태’⁶⁾ ‘인천사태’ 등으로 불렀다. 5월 7일 안기부가 수사지휘 공문에서 ‘5.3인천소요사건’⁷⁾으로 규정한 이후 검찰도 ‘인천소요사건’으로 부르고 구속자들을 소요죄로 기소했다. 경기도경찰국은 인천5.3항쟁을 “재야 단체 및 과격학생 4,000여명이 주동하여 각목, 화염병, 보도블럭, 등으로 폭력난동시위를 감행,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민정당사 방화, 민간 및 경찰차량을 탈취, 방화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을 파괴한 사건”⁸⁾ 등으로 규정하며 반독재 민주헌법 쟁취라는 행사 목적보다는 일부 자극적 구호나 시위 과정에서

1) 「5.3인천소요사태수사조정(안기부)」(1987.5.7.)

2) 인화공사, 「5.3 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1986.5.7.)에서 안기부가 제시한 1차적 목적은 인천소요사태를 계기로 “전국 좌경 불순 단체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배자 추적을 통해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연계조직을 발본 색원하여 의법처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수야당과 재야 세력을 분리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음.

3) 부천경찰서, 「5.3사건 수사상황보고」

4) 부평경찰서, 부천경찰서 수사 보고서, 「5.3시위사건수사보고」

5) 경기도경 수사상황보고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5.20~6.14)

6) 인천동부경찰서 「5.3사태종합수사상황보고」

7) 안기부 수사조정(5.7) 이후 내무부 대검, 치안본부(5.17), 대공수사단(5.17) 경기도경(5.18)에서도 사용

8) 「5.3사건종합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찰국(5.20)

폭력성만을 강조하였다. (김창수, 2020)

○내무부의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1986.5)

仁川騷擾事件은 6.25 이후 우리가 放心하고 있는 사이에 社會 各分野에 돌아난 容共不純 勢力이 新民黨의 改憲推進仁川·京畿支部 結成大會日을 現體制顛覆을 위한 ‘決定的인 鬭爭의 날’로 定하고 緻密한 計劃과 事前 準備 아래 激烈한 暴力示威를 敢行하여 治安機能을 癱痺시킨 後 이를 利用 所謂 民衆蜂起를 誘發하려 하였던 事件이라 規定할 수 있음.⁹⁾

○대검찰청의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이 事件은 學園의 急進 左傾分子와 在野의 일부 過激勢力이 新民黨의 改憲推進仁川·京畿支部 結成大會日을 現體制顛覆을 위한 ‘決定的인 鬭爭의 날’로 定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 아래 激烈한 暴力示威를 敢行하여 治安機能을 마비시킨 후 이를 이용 소위 民衆蜂起를 誘發하려 하였던 事件이라 規定할 수 있음“.¹⁰⁾

2. 당시 언론 보도 양상

당시 신문과 방송의 보도는 민주화운동의 한 분수령이었던 인천5·3민주항쟁이 과격 운동권의 폭력 시위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당시 언론은 천편일률적으로 인천5·3민주항쟁을 ‘좌경, 용공 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라는 공안 당국의 주장을 여과없이 기사 제목화하였으며, 시위의 성격을 안기부의 주장과 동일하게 ‘소요’라고 규정한 신문도 있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KBS TV를 비롯한 방송들은 화염에 휩싸인 민정당 지구당사와 거리에 가득한 최루탄 분말, 깨진 보도블록과 시위대가 전경을 구타하는 장면을 반복해 방송하며 5·3시위를 ‘폭력 난동’이라고 보도했다.¹¹⁾ 그리고 시위대의 반미 주장 등을 주로 문제 삼아 5·3시위를 좌경 용공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라고 매도했다. 신문들도 5·3시위를 “격렬 구호 충돌 시가 수라장” “인천 시위 조종주동 32명 수배”(『동아일보』 1986. 5. 4), “인천 사태 민민투·민통련이 주도” “급진학생 과격 재야가 소요 유도” “인천사태 민민투·민통련이 주도, 민중봉기 유발 노려”(『한국일보』 1986. 5. 20~23)27),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것도”(『중앙일보』1986. 5. 5)라고 “인천의 과격시위 배후 가려져야”(『경인일보』, 5월5일자), “좌익정체 드러낸 인천사태”(『경향신문』, 5월 5일자), “급진세력의 폭력은 민주화에 역행한다”(『동아일보』, 5월5일자), “사회존립 위협하는 좌익난동의 실체”(『서울신문』, 5월 6일자) 보도하며 ‘소요’로 규정하고 과격성을 집중 부각하거나 용공혐의까지 제기했다.

9)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1986.5)

10)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11) 당시 정부는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5·3항쟁과 관련 ‘보도지침’을 5월 3일부터 5월29일까지 6회 이상 각 신문에 하달하였고 언론들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보도 형식과 내용을 조정했다.

3. 연구 목적· 방법· 내용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1986년 당시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수 홍보정책실에서 각 신문사 편집국으로 하달한 보도지침 및 보도지침에 의거 작성 기사문을 분석함으로써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된 제5공화국의 여론과 대중조작 실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서 5.3민주항쟁을 전후한 정치 및 언론환경을 개관하고,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일간지의 보도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할 것임. 보도지침 및 기사문은 문장 단위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통계적 어휘 분석을 활용함.

■연구 내용

- 제5공화국 언론환경과 보도지침 개관
- ‘개헌’ 및 ‘5.3인천사태’ 관련 보도지침 분석
(1985년 10월 19일~ 1986년 8월 8일)
- ‘개헌’ 및 ‘5.3인천사태’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문 분석
 - 분석대상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경인일보
 - 분석대상기사: 약 200건 (사설 포함)
- 사건별 보도지침 이행 분석
- 언론사별 보도지침 이행 비교
- 분석 내용 종합 및 남은 문제들

제2장 86년 국내 정치 상황 및 언론 환경

1. 정치 지형

인천 5.3항쟁 당시의 한국의 정치 지형은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85년 2.12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내건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직선제 개헌이 86년 국면에서 최대의 정치 현안이 되었다. 2·12총선 1주년을 맞은 86년 2월12일 신민당과, 재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이 1천만명 개헌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과 민추협을 재야세력과 분리시키고 3당 대표회의 형태의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내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이른바 ‘이원집정제’를 통한 재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4월 28일에 서울대학교 전방입소반대시위에서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29일 신민당 이민우 총재와 민추협이 김대중과 민통련의 문익환 목사는 야권공동기구인 ‘민국련’ 회의를 열고 “소수 학생들의 반미, 용공, 과격 시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4월 30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3당대표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내 개헌 의사를 밝히고 신한민주당은 가두서명과 시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회담후 이민우 총재는 “좌익 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김세진 이재호의 죽음으로 분노한 학생운동 세력의 반발이 터져나왔으며, 민국련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태도에 대한 불신도 생겨났다. 이튿날 민통련은 29일의 ‘민국련’ 성명 내용을 부인하고 이민우 총재의 좌익학생 배제 운운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야권연락기구인 민국련에서 탈퇴할 것과 민통련 집행부도 총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민통련의 수습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회담에서 신민당이 보인 타협적 태도와 신민당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고문의 ‘좌익배제’ 발언 등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영의 불신을 불러왔으며,¹²⁾ 이같은 개헌투쟁 전선의 균열은 5·3 당일 학생과 노동자 시위대가 신민당의 보수대타협을 성토하는 것으로, 또 민통련 주도의 연좌시위에 호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양상 등으로 나타났다.¹³⁾

2. 언론환경

전두환 정권은 1980년 언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을 탄압했다.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은 이른바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을 체계적으로 통제했다. 신문의 기사내용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검열받았다. 정권에 유리한 기사는 크게 보고하고 불리한 보도는 축소하도록 한 것이다. (양승목, 2004: 65)

1980년 7월과 8월에 걸쳐 ‘언론 정화 작업’이 강행되었다. 172개의 정기간행물이 폐간되었고, 970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이 무능력하다거나 반정부 성향이라는 이유로 해직되었다. 1980년 11월에는 7개

12) 5.3 당일 배포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전국학생연맹,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합, 서울노동운동연합, 5·3노동자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에 신민당과 보수대타협에 대한 강한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13) 김창수(2021)

의 일간지와 3개의 민간방송국, 6개의 통신사가 문을 닫았다. 동양방송(TBC) 과 동아방송(DBS)은 한국방송공사(KBS)로 통폐합되었고, 6개의 민간통신사들은 연합통신사로 통폐합되었다. 또한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들을 지방에 주재원을 두지 못하게 되었고, 지방 일간지들은 서울에 상근 주재원을 둘 수 없었다. 신문의 경우 서울은 6개 일간지, 지방은 1도1사 체제로 축소되었고, MBC는 서울에서 지방사의 주식 51%를 보유하면서 지방사를 계열사로 흡수했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면서 살아남은 언론사는 과점 시장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정장해나갔다.¹⁴⁾ (이진로, 2003: 278)

● 신군부의 탄생과 「언론기본법」

제5공화국의 언론정책은 언론 자유의 신장이나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언론을 마음대로 조작하기 위하여 강압과 회유라는 2중의 정책을 통한 통제정책이었다.¹⁵⁾(안종묵, 2002)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0년에 제정한 언론기본법은 제5공화국이 언론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다. 언론기본법의 법조항은 막연한 표현, 규정의 불분명성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언론 탄압에 사용되었다. 언론기본법 중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9와 제22조는 언론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었다. 특히 등록과 취소에 관한 제24조는 문공부장관이 언론사의 등록 취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안종묵, 2002) ‘보도지침’과 같은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을 열었다.

● 5공화국 정권은 위와 같은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방법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길들이기도 했다.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특혜는 언론 통폐합 이후 남은 신문 방송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언론기업의 독점화가 심화됐다. 언론사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게까지 제공됐는데, 임금인상과 소득세 면세 등 언론인들에 대한 대대적 특혜제공과 언론인의 각종 처우개선은 5공화국정권의 언론정책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유신체제가 수립되면서 언론에 준 국가기구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언론의 상당 부분은 반강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전두환 정권 시기로 들어와서는 자발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회유책의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언론기업은 이런 기능을 수입받는 대가로 국가의 지원하에 거대 언론 자본으로 성장했고, 기자직은 사회의 어느 직종보다 높은 보수, 다양한 물질적 보상과 함께 많은 권력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지식인 집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최장집, 2019)

제5공화국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홍보정책실)은 언론의 정보를 보도 통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통해 통제하고 정부 홍보를 관리하는 사령탑이었다. ‘보도지침’은 매일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전달되었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규제한 일종의 ‘편집지침’으로 기능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기사문의 형식까지 치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신문사에 시달렸다. 5.3항쟁 당시 신문의 기사내용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검열받고 있었음. 보도지침의 작성 기준은 정권 유지의 유불리였다. 정부의 보도지침을 언론사가 충실히 이행하는 여론조작은 87년 6월항쟁까지 이어졌다.

14) 윤성이, 「민주화운동의 좌절」,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한울, 2018.

15) 안종묵, 「제5공화국의 대언론 홍보정책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2권2호(2002.8)

제3장 개헌논의와 개헌서명운동 관련 보도지침의 변화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하달한 보도지침은 사건의 기사화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기사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본문의 논조와 핵심 용어의 재정의 등을 비롯하여 기사문 작성 형식에 해당하는 지면 배치, 제목 달기 방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신문기사문은 보도를 전제로 작성되는 문장으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명료성이 작성 원칙이다. 기사문은 사건기사, 인터뷰 기사, 르포·스케치 기사, 사설 칼럼 기사 등으로 나뉘며 지면 배치에 따라 톱기사, 사이드 기사, 중간톱 기사, 단신, 박스 기사 등으로 나뉜다. 기사문은 표제(head line) 전문(lead)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정권안보를 위해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매일 각 언론사에 은밀하게 전달했던 것으로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에 관계없이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의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가(可), 불가(不可), 절대불가'의 지시를 내렸다. 어떤 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면 어느 위치에 몇 단으로 싣고 제목도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는 사용해야 하고 당국의 분석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등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기사 크기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조용히', '너무 흥분하지 말고', '크지 않게', '눈에 띄게', '돋보이게', '균형 있게', '적절하게'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가면서 세밀하게 통제했다.

-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한국일보 김주연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언론사가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안기부나 보안사 등의 기관원들이 편집국에 와서 신문사의 존폐 문제를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한다. 또한 언론사에 드나들면서 보도를 직접 통제한 기관원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안기부 1명, 보안사 1명, 문공부 홍보조정실 1명, 치안본부와 종로경찰서 직원 등 가장 많을 때는 7명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는 보도지침 위반과 관련하여 언론인들에 대한 구타와 고문까지 상당수 있었다.

기사의 취사 선택, 보도 방향등은 언론의 기본적 권리이며, 기사 종류나 형식도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공부 홍보정책실은 국내 언론의 편집권을 일괄 통제하는 최상위 편집국이었던 셈이다. 홍보정책실 홍보담당관들이 작성한 보도지침은 각신문사의 편집국 간부들에게 매일 전화로 통지되었으며 이행 결과는 즉시 점검했다.

1. 개헌논의의 부상과 보도지침 91985년 11월~86년 1월 31일)

-85년말부터 개헌관련 국회 특위 구성안이 제출되는 등 개헌논의가 부상하자 정권은 “국회 개헌특위를 보도하되 개헌이라는 문구는 빼고 그냥 특위라고 표현할 것”(85년 11월 12일자)과 같이 언론에서 ‘개헌’이라는 문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목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10여 건 하달함.

〈개헌논의 관련 보도 지침〉

일시	내 용: 8회11건	번호
11.12	-국회 「개헌특위」 관계: '개헌'이라는 문구는 빼고 그냥 '특위'라고 표현할 것	
11.27	-국회 운영위 오늘하오 2시부터 개헌특위 안에 대한 찬반토론 예정. 해설, 사실 불가. 1면 스트레이트 3단으로 할 것. 꼭 엄수할 것	
12.12	아래 사항을 연말 및 송년 특집에서 다루지 말 것 1.개헌공방 전말 ...3.재야권 현황 4.양김씨 인터뷰....10.주미대사관 무관 사건	
12.24	-이민우 총재 회견. 1면 톱기사로 세우지 말고, 제목에서도 '1000만명 서명운동', 「개헌」, 「헌법논의」 등의 표현을 쓰지 말 것	
1.17	-신민당의 개헌 1,000만명 서명운동 관계, 제목에서는 '장외투쟁'으로 뱌을 것	
1.23	-대통령국정연설의 보도 제목에서 가급적 '개헌'이란 표현을 쓰지 말 것 -신문제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 또는 「1,000만명 서명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	
1.25	-이민우 총재 회견 관련, 1면 톱기사로 쓰지 말 것, 별도 박스 기사로 신지 말 것, (회견) 내용 중 '개헌논의 88년 이후'를 부정하는 내용은 쓰지 말 것 -민정연수원 난입 1차 공판 관련, 학생들 주장 중 '헌법철폐'는 너무 부각시키지도 또한 정당화시키지 말 것. -제목에 '개헌논의' '헌법논의' 등의 표현을 쓰지말 것	
1.31	-각대학 데모 점차 가열, 크게 보도하지 말 것. '개헌찬성, 헌법철폐' 등 학생들의 주장은 일체 신지 말 것.	

2. 개헌서명운동의 전개와 보도지침 (2월11일~3월 8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개헌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정략을 포기하는 대신 개헌서명운동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국민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2월 10일 대검찰청은 개헌 서명 운동의 유형별 단속 및 처벌지침을 시달하고, 11일에는 서명운동을 포함한 일체의 개헌운동을 의법 처리하겠다는 '위협조'의 지침을 발표하고 있음. 외신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는데,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미국무성 대변인이 한국의 개헌청원권은 국민의 권리라는 답변을 내놓자 정부는 이 원칙적 논평도 보도 금지했음.

-당시 언론에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밝힌 정부 여당 주도의 '89년 개헌'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허용되었는데, 야당이 주도하는 개헌론이 아닌 정부 여당이 제시한 89년 개헌론을 국회특위와 정당대표회담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국운영 방침을 반영한 것임.

-2월 24일 보도지침을 보면, 청와대 3당 대표회담에서 내놓은 '89년 개헌 용의'가 정부 여당이 제시할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언론이 강조하고 부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당시 지침에서 개헌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신문의 책임'이라는 언급까지 사용하고 있어 정권이 개헌론 차단에 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일시	내용 :12회 18건	내 용
2.11	-김동완 목사, 개헌 서명운동 움직임 관련해 자택보호(연금), 금지된 사실은 보도하지 말 것.	
2.14	-‘한국 정부, 개헌서명에 강경조치’에 대한 미 국무성 논평은 보도하지 말 것 -김 법무 회견(담화 발표), 1면 톱기사로 보고하기 바람 ¹⁶⁾ -신민당 정무회의, 의원총회 관계는 스케치 기사 쓰지 말고 스트레이트기사는 2단으로 할 것.	
2.15	-민추협 동정기사 일체 보도하지 말 것.	
2.18	-(개헌) 서명 관련 야권 인사들에 대한 연행 조사 관계는 사법적 조치이므로 사회면에서 다룰 것.	
2.21	-신민당 확대간부회의의 관계기사는 ‘서명운동 확산키로’등의 제목을 붙지 말 것 ‘확산’대신 ‘계속’으로 -신민당의 개헌청원권 문제에 대한 미 국무성 논평은 보도하지 말 것.	
2.24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1면 톱기사로 신고, 해설 등에서 정부 여당의 마지막 카드가 확고한 방향임을 인정하고 강조, 부각시킬 것. 그래도 안 되면 신문 책임임. ¹⁷⁾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위원회의 솔라즈 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야당 개선서명을 저지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보도하지 말 것	
2.25	-3당 대표회담에서 거론된 89년 개헌 관계 기사를 취급할 때 개헌 내용에 관한 (직선제, 이원집정부제) 해설 기사나 기고, 논쟁 등은 신지 말 것	
2.26	-이민우 총재가 청와대 회담에서 밝힌 “89년 개헌 반대” 의사는 신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므로 쓰지 말 것.	
2.28	-미 국무성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 개헌서명권리 있다”고 언급한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3.5	-민통련의장 문익환, 개헌서명 관계 기자회견하려다 경찰 차단으로 불발. 이 사실은 보도하지 말 것 -신민당, 개헌 일정 결정(총재단 회의의 확정)은 작게 보도하기 바람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동정은 보도하지 말 것.	
3.6	-신민당 서명자 명단 발표. 명단은 물론이고 발표 사실 자체도 보도하지 말 것 ¹⁸⁾	
3.8	-민정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9년 개헌 확산’은 1면 톱기사로 크게 보도하기 바람	

3. 신민당 개헌 현판식과 집회 확산기 (3월 11일~4월 28일)

- 3월 11일 서울 지부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청주 등의 순으로 신민당의 개헌추진본부 결성식이 개최되었음. 당시 홍보정책실이 지역별 개헌현판식의 보도에 반복적으로 제시한 지침은 “**스케치 기사 쓰지 말 것, 기사 본문은 2단으로 길지 않게 보도할 것, 사진 사용하지 말 것**”이었으며, 집회참가 인원이나 규모,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여론이 집중이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음.

-부산 현판식의 경우 시위 참가 인원이 수만명으로 늘어나자 경찰 추산 인원(4,500명)을 제시하고 “신문의 양심”을 거론하며 별도의 청중 추계 보도를 차단하고 있음.

-신민당 개헌 현판식이 개최되면서 지역별로 수천명에서 1만 5천 여명이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행진, 가두점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도 발생했으나 축소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음.

16) 신민당과 민주협 및 재야세력이 조만간 개헌서명운동에 착수할 기미를 보이자 대검찰청은 2월 10일, 서명운동 유형별 단속 및 처벌지침을 시달하고, 11일에는 서명운동을 포함한 일체의 개헌운동을 의법처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음. (당시 김성기 법무장관의 초강경 담화는 이 지침대로 석간신문의 톱기사로 보도됨)

17) 청와대 3당 대표회담에서 ‘89년 개헌 용의’로 2월 정국의 개헌 논의를 진정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확고한 마지막 카드’였으므로 이를 보도에서 강조하고 부각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론이 조성되지 않으면 ‘신문의 책임’이면서 노골적으로 언론을 협박하고 있는 지침임.

18) 86년 3월 6일, 신민당과 ‘민주협’은 2월 12일부터 시작한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개헌 촉진 1천만 서명운동’의 1차 서명자 5,941명의 명단을 공개했음.

▶사진을 내보내라는 광주 현판식의 보도지침은 이례적으로, 폭력사태를 강조한 인천대회 관련 보도지침을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개헌 현판식 행사 관련 사진 사용은 예외없이 금지되었는데 인천대회 이전까지 유일한 예외는 광주 대회(3월 31일) 당시 시위군중들 ‘축 직할시 승격’ 아치 불태우는 것(사진)을 사회면에 쓸 것“이라고 허용한 것임. 이는 광주 개헌현판식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음.

신민당 개헌현판식 지역별 행사 관련 보도지침

일시	내 용: 6회 19건	번호
3.11	신민 서울 개헌추진본부 결성식 관계 ① 별도 스케치 기사 쓰지 말고 묶어서 2단 기사로 보도할 것 ② 제목은 세줄이나 네줄씩 뽑지 말고 두 줄로 할 것 ③ 김대중 가택연금 사실은 가급적 보도하지 말도록 -“서울대 경찰 투입 자제 촉구”는 사실과 다르니(결정한 것이 아님) 보도하지 말 것 - 종로구청서 개헌 관계 유인물 돌린 것, 보도하지 말 것.	현1
3.24	-신민당 부산 개헌 추진본부 현판식 관계 ① 2단 기사로 처리하고 제목을 2줄로만 ② 사진, 스케치기사 쓰지 말 것. ③ 경찰이 추산한 청중 수 옥내 2,500, 옥외 2,000, 계 4,500. 각 신문이 양심적으로 알아서 할 것 ④ 김영삼 “대통령과 양 김씨 회담 제의”는 별도 기사로 처리하지 말 것	현2
3.31	▲ 신민 광주 개헌 집회 관계 ① 사진, 스케치 없이 기사는 2단으로(길지 않게) ② 치안본부장 발표, 눈에 띄게 보도할 것. ③시위군중들, 「축 직할시 승격」 아치 불태우는 것(사진) 사회면에 쓸 것 ¹⁹⁾ ▲해직교수들, 고대교수들의 개헌지지 성명 관계, 사회면에 크지 않게 1단 기사로 할 것 ▲국회 관계 : 정동성의원(민정)의 질문 중 △광주 사태(개헌 현판식 관계) 신민당이 군중 선동 △야당은 각성하고 민주 투쟁에 참여하라 △김대중, 김영삼은 대통령직 야욕 버려야 : 이상의 내용은 눈에 띄게 보도할 것	현3
4.19	대통령 집무실, “목민심서가 눈길을 끈다”고 쓸 것 -대통령 기상회견에 ²⁰⁾ 대한 스케치 기사에서, 기내 임시집무실에 “다산의 목민심서(牧民心書)가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는 식으로 뽑을 것 -대전 신민당 개헌 현판식 대회는 전례대로 1면 2단 기사로 처리하되, 길지 않게 보도하고 스케치성 기사는 심지 말 것.	현4
4.26	-신민당 청주 개헌대회 기사는 1단으로 처리할 것 -한국청년회의소 총회에서 이원홍 문공부 장관 초청 연설 중 특히 시국 관계에 언급한 내용은 눈에 띄게 보도하기 바람	현5
4.28	-청주 신민당 개헌현판식 대회 기사는 전례대로 사진 없이 2단 기사로 보도할 것	현6

19) 시위관련 사진이나 스케치 기사는 금지 대상이다. 여기서 아치를 불태우는 사진을 쓰라는 지침의 의도는 시위군중의 폭력성과 과격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전두환의 유럽방문시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의 기자회견을 말함

제4장 5.3민주항쟁의 전개와 보도 지침

1. 5.3항쟁 보도지침

○ 5.3민주항쟁 관련 보도 지침은 5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하달되었으며 지침 내용은 모두 10건임. 개헌정국을 제도내로 흡수하여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개헌서명과 현판식으로 확산되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인천시위를 계기로 공세로 전환하여 대대적 검거 선풍을 일으켜 재야와 민주화세력을 위축 배제시킨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프레임으로 주도하려는 기도였음.

○ 그 가운데 5.3 직후에 전달된 보도지침을 보면 “1면 머리기사(톱기사)는 반드시 ‘한·영 정상회담’으로 할 것. 따라서 시위 기사는 1면 사이드 톱기사, 사회면 톱기사 또는 중간 톱기사 등 자유 재량으로 할 것” 이라고 기사의 비중과 지면배치를 명시하였다. 기사 내용과 방향과 관련하여 “▲ 과격 시위-‘학생, 근로자들의 시위’로 하지 말고 ‘자민투’, ‘민민투’, ‘민통련’ 등의 시위로 할 것(실제로 각 단체가 플래카드 들고 시위) ▲ 폭동에 가까운 과격, 격렬 시위인 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룰 것. ▲ 이같은 과격 시위를 유발한 신민당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 등 시위단체, 시위양상, 책임소재를 적시한 지침을 내렸음

○ 보도지침은 대체로 5.3당일 시위의 과격성과 폭력성, 신민당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작성하고, 정권에 불리한 과잉진압, 연행 구속자 조사 과정에서의 고문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인천5.3민주항쟁 관련 보도지침 목록〉

일시	내 용: 7회 12건	번호
5.3	인천 현판식 “학생·근로자 시위”로 하지 말 것 -인천 개헌 현판식 및 시위 관계 ① 1면 머리기사(톱기사)는 반드시 ‘한·영 정상회담’으로 할 것. 따라서 시위 기사는 1면 사이드 톱기사, 사회면 톱기사 또는 중간 톱기사 등 자유 재량으로 할 것 ② 기사 내용과 방향 ▲ 과격 시위-‘학생, 근로자들의 시위’로 하지 말고 ‘자민투’, ‘민민투’, ‘민통련’ 등의 시위로 할 것(실제로 각 단체가 플래카드 들고 시위) ▲ 폭동에 가까운 과격, 격렬 시위인 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룰 것. ▲ 이같은 과격 시위를 유발한 신민당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	항1
5.5	-서울대 분신 사망 학생의 장례식은 주변 정황에 대한 스케치 기사를 쓰지 않도록 ²¹⁾ -인천시위 관계 기사 및 해설에서 “경찰의 과잉개입이 과격데모를 유발”했다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항2
5.15	-신민당의 인천사태 보고는 치안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균형있게 보도할 것	항3
5.19	-대검의 인천사태 조사발표, 사회면 톱 또는 1면 사이드 톱기사로 눈에 크게 띄게 보도할 것	항4
5.26	-인천사태 관련 구속 학생 60여명. 26~30일까지 순화교육. 순화교육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말 것.	항5
5.29	-교육 중인 인천사태 관련 구속 학생 60여명. 6월 1일께 발표(교육관계), 사전에 보도하지 말 것.	항6
6.17	-신민당 고문 사례 발표 긴급적 보도하지 말 것 ²²⁾	항7

2. 신문사별 5.3 기사 분석

구 분	조선일보, 5월 4일자	비고
제 목	新民 仁川대회 못열어 :격렬 시위 당지도부 입장 못해	격렬 시위
부 제	投石, 放火.....市街마비, 학생 경찰 화염병 최루탄 攻防	투석 방화 시가 마비
요 약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에 물려든 학생 근로자 1만여명과 경찰이 충돌하여 대회 지도부가 대회장에 입장하지 못해 대회 무산됨 -일부과격학생들 ‘군부독재와 타협하는 신민당 각성하라’ ‘의원집정부제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민정당 제1지구당 화염병 투척 방화, ‘미일 외세 물러가라’ 구호와 성조기 화형식,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의 경찰의 고의적이고 조직적 방해로 대회 무기연기 발표문 인용함 -강민창 치안본부장 경고문: “불안조성 좌시 안해” -민정당 대책회의 결과 장외투쟁 중지 촉구	‘일부’ 과격학생, 신민당, 치안본부, 민정당 입장
평 가	-인천대회 투석과 최루탄 속에 무산됨.	현판식무산
주 장		
사 진	불타는 신민당원 승용차 1매	방화
지면 (분량)	1면 사이드, 스트레이트 (7단)	

구 분	동아일보 5월 5일	비고
제 목	인천시위 격렬 큰 혼란	혼란
부 제	學生등 5千·警察 萬여명 一進一退공방 부상자속출 최루탄탈취 경찰차 불태워	탈취, 방화
요 약	인천시민회관 주변의 시위는 과격양상으로 치달아 오후 6시경 진압	과격시위
평 가	“5공화국 이래 가장 과격하고 격렬한 시위양태를 보였다”	과격, 격렬
주 장		
사 진		
지면 (분량)	11면 사이드	

21) 스케치 기사는 말 그대로 사건 현장의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을 보듯이 묘사하는 기사 형식이다. 사실과 사건 정보를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스케치 기사는 취재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림 그리듯’ 표현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현장 분위기나 모습을 동영상처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보도의 목적이다. 스케치 기사는 감성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글이므로 평가나 논평과 같은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 오히려 사실에 가까우며 현장성과 생동감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22) 신민당은 인천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3일 당 소속 변호사들을 인천교도소로 보내 5.3인천시위관련 혐의로 구속된 학생, 노동자, 신민당원 등 5명을 면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가한 극심한 고문 사례를 6월 17일 보고서 형태로 발표했다.

구 분	경인일보 1986년 5월 5일자	비고
표 제	폭력난무 市街 공포의 도가니	폭력, 공포
부 제	新民 「인천대회」 학생 근로자 난동	난동
요 약	화염병 각목 휘둘러 아수라장, 상가철시로 영업에 큰 타격 공포에 떨며 시위 끝나기 기다려. 시위대의 차량 탈취 방화, 강제해산후에도 산발적 기습시위 계속 교통초소 형사기동대 봉고차 전소	화염병, 각목, 공포, 탈취, 방화, 차량전소
평 가	상가 철시로 영업타격, 격렬한 시위로 공포감, 전철 승객 큰 불편	공포감, 불편
사 진	최루탄 운반차 밀고 가는 장면 1매, 시위대의 전투경찰 폭행 장면 1매	탈취, 폭행
분류 (분량)	사회면 톱, 스트레이트 (8단)	

3. 신문사별 보도지침 이행 분석

일간지 기사별 분석 결과를 보도지침과 비교하여 이행율을 제시할 계획임

보도지침/언론사별	조선	동아	한국	경향	경인	이행율
1면 머리기사(톱기사)는 반드시 '한·영 정상회담'으로 할 것. 시위는 1면 사이드톱, 사회면 톱 혹은 중간톱으로 다룰 것	○	○	○	○	x	4
'자민투' '민민투' '민통련' 부각할 것						
폭동에 가까운 과격 격렬 시위 비판적으로 다룰 것	○	○	○	○	○	5
과격시위 유발한 신민당의 문제점 지적						
경찰 과잉개입이 과격데모 유발 쓰지 말 것 ²³⁾						
이행율						

● 주요 중앙 일간지 모두 당일 전달된 보도지침 제1항('1면 사이드톱 혹은 중간톱으로 다룰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1면 톱은 전두환-대처 한영 정상회담

그런데 「경인일보」는 보도지침과 반대로 5.3을 1면톱으로 한영정상회담을 사이드톱에 배치했는데 지역신문의 편집 기준을 우선한 것으로 보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경인일보
1면 사이드톱	1면 중간톱	1면 사이드톱	1면 사이드톱	1면톱
				

23) 시위의 주장, 원인, 경찰 대응은 성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위현장 상황 스케치

4. 지역별 개헌현판식 시위양상과 보도 분석

인천53민주항쟁의 과격성과 폭력성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분석임. 부산, 전남, 전주, 청주지부 결성식에도 신민당의 행사와 별도의 학생과 재야단체의 집회와 시위는 계속돼왔음. 24) 지역별 집회 참가인원, 집회와 시위 형태(가두행진, 투석전, 화염병 사용), 충돌과 파손, 경찰 대응과 진압 방식, 연행 및 구속 인원 등을 분석할 예정임.

구분	서울 3.11	부산 3.23	광주 3.30	대구 4.5	대전 4.19	청주 4.27	인천 5.3
참가인원	1,500	100,000 4,500경찰	20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시위방식	없음	시가행진 시위시도	시가행진, 투 석전, 최루탄발 사	가두시위 연좌농성	시가행진 격렬가두 투석전	화염병 최루탄 격렬시위	투석, 화염병, 최루탄 바리케이트
충돌	없음	없음	기념탑 방화			교통마비 시가철시	방화
진압방식	없음	해산유도	12시10분 강 제해산	강제해산	7시10분 강제해산		17시 40분 강제해산
연행자 (구속자)	없음	미확인	69명	141명	9명 구속	6명 구속	319명 연행 129명 구속

● **잠정적 시사점:** 신민당 개헌현판식의 시위양상 분석결과 부산대회 때부터 현판식과 별도의 가두 시위가 시도되었으며, 광주 대회에서는 시가지 가두행진, 가두시위가 심야(12시 10분)까지 이어졌으며, 직할시승격기념탑에 방화하는 등 격렬시위로 투석에 경찰은 최루탄 발사로 대응한 바 있음. 대전대회에서도 3천여명 시위대가 현판식과 별도의 시가행진과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화염병 투척과 최루탄 발사로 교통이 마비되고 상가가 철시하였음. 이같은 지역별 시위양상을 비교해보면 인천대회가 특별히 폭력적이라거나 격렬하다 하기 어려우며 광주, 대전, 청주를 거치면서 점차 격렬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인천 현판식의 경우 노동운동단체와 학생운동단체의 조직적 참여가 있었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시위대를 압박하고 봉쇄한 경찰의 공격적 진압 방식, 그리고 최루탄 운반차 돌진, 가스차 돌진과 고압과 같은 경찰 측의 거듭된 실수와 미숙한 대응이 충돌을 격화시켰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음.

24) 운동권 학생 독자행동 大邱대회부터 시작되었다. 신민당 개헌추진지부경성대회에 참여한 운동권 학생들의 독자행동은 지난 4월5일 대구대회에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 4.19에 있는 대전대회에서 부터 가두행진과정은 물론 대회 시작전, 대회진행 중에도 완전히 신민당행사와 별개로 움직였다. (『조선일보』 1986. 5월 4일자)

제5장 감정적 결론과 향후 과제

-인천5.3항쟁에 대한 여론과 대중적 이미지는 안기부와 치안본부 등 신군부의 공안기구와 언론통제기관인 문공부 홍보정책실이 작성한 보도지침과 그에 의거한 언론 보도에 비롯되어 재생산되어 온 것으로 보임.

(구체적 분석 결과 요약)

- 언론기본법은 6월항쟁 이후 폐지되었으며 ‘보도지침’도 사라졌지만 당시에 형성된 5.3항쟁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음. 보도지침의 폭로로 민주화 이전의 언론이 정권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서 만들어진 정보와 이미지라는 사실은 대체로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왜곡과 조작이 이뤄졌는지, 또 보도지침과 무관하게 이뤄진 허위 사실이나 왜곡 보도 실태에 대한 학술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특히 문공부 홍보정책실의 보도지침의 이행과정에 안기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보도지침의 작성과정에 안기부와 치안본부, 검찰 등의 공안 기구가 어떤 방식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함.
-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을 언론 본연의 기능으로 볼 때 왜 시위양상이 격렬해졌는가를 제기해야 하며, 기존 개헌헌판식과 달라진 경찰 대응도 주목했어야 함.
- 언론은 신군부와 제5공화국이 조성한 언론 통제와 회유라는 환경에서 탄압받았지만, 역설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거대한 규모의 언론자본으로 성장했으며, 언론과 권력, 언론과 자본의 유착도 더욱 구조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언론개혁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음.
- 방송, 대학별 학보, 민주화운동 단체, 학생운동 노동운동 발간 언론, 중립적 언론은 추후의 검토 과제임

■ 참고 자료 및 문헌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지침』(2015). 두레. 2017.

신기혁. 제5공화국이 한국광고사에 미친 영향

안종묵(2002). 「제5공화국의 대언론 홍보정책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제2권2호.

윤성이(2018). 「민주화운동의 좌절」,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한울.

이재성(2021). 1986년 개헌운동과 5.3인천민주항쟁. 『기억과전망』 겨울호

인천민주화운동센터(2021), 『인천5.3민주항쟁 기초조사 보고서』

조철래(2015). 『미디어글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장집(2019).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부록:

1.언론사별 사설 내용 비교표

언론사별 사설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용공혐의와 대응방안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가 발견됨. 주제문, 성격규정, 문제제기,요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비교해 봄.

구분	조선	동아	한국	경향	경인
제목					
주제문					
성격					
문제점					
요구					

2.부천서 성고문사건

이 사건은 서울대 의류학과 재학중이던 권인숙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의 가스배출기 회사(성신)에 위장취업 사실이 드러나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천경찰서 문귀동 형사가 5.3 사태 관련자의 정보를 자백받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정권은 여파를 줄이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는 보도지침을 하달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주요 일간지 사회부기자들을 별도로 회유하였음.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되는 사건으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후의 과제로 남김.

3. 토론: 군부와 집권여당은 5.3을 소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념공세와 대중조작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음. 5.3항쟁 관련 배후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했다. 공안정국을 조성한 국가기구의 반인륜적 야만성이 성격이 드러나 전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음.

-86년 9월에는 문공부의 홍보정책실이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공작을 해온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대중 조작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으며, 이듬해 87년 2월에는 5.3을 주도한 학생운동 조직인 ‘민민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음.

-5.3민주항쟁 이후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저지하거나 89년까지 유보하기 위해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여론과 대중조작을 자행했으나, 일시적 유예였을 뿐 6월의 역사적인 항쟁을 막을 수는 없었음.

발표2

인천5.3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 그리고 노동자대투쟁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 인천5.3민주항쟁의 운동사적 의미: 정리의 필요성

인천5.3항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화운동사는 평가가 엇갈리는 사건과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는 찾기 어렵다. 그 중에서 인천5.3항쟁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한 편이다. 최근에 출간된 공식적인 지역민주화운동사에서 인천5.3항쟁은 1) 민통련과 인사연, 인노련 등에 대한 탄압으로 받은 피해 2) 노선 갈등과 연대투쟁 실패로 인한 분열 및 혼란 3) 민주화운동권 외 대중의 참여 제한적 4) 급진적이고 과격한 구호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2) 5.3항쟁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통한 6월 항쟁의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⁵⁾

인천5.3항쟁에 대한 증언록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에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평가들이 들어 있다. 그 중에서 호인수, 김수영, 권오광의 의견을 인용해 본다.²⁶⁾

어떤 사람들은 ‘5.3으로 인해서 6월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인천 5.3이 인천시민 전체의 켜기였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 조직 활동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상당수가 모여서 ‘이 사람들만의 큰 사건이었다.’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죠.(호인수 증언, 445쪽)

80년 이후 대중적으로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표출된 게 5.3이었다고 봐요. ... 운동의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 ‘5.3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 운동의 땀방울이 커져 가면서 대중 쪽으로 좀더 운동의 역량이 확산된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연계될지는 모르겠지만 87년 6월항쟁이나 노동자대투쟁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평가해요.(김수영 증언, 157-158, 161-162, 164쪽)

이미 85년 말에 문건이 나오면서 정파적 입장에 따른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 분위기에서 5.3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3때 다양한 정파의 혁명적 주장들이 대두하게 된 거예요. 주사그룹, 인민노회, 인민노련 등이 노동판을 만들면서 이후에는 노조를 만드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그게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5.3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권오광 증언, 117쪽)

이 글은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평가들 중에서 5.3항쟁이 이듬해인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에 미친 영향 또는 86년 민주화운동과 87년 민주화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에 다양하게 제시된 5.3항쟁에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그 내용 각각으로는 큰 이견이 없는 것들이 많다. 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반면교사’, ‘징검다리’ 등의 비유적 표현들이 학술적이고 엄밀한 개념을 통해서 논증 가능한 진

25) 『인천민주화운동사』 pp. 172-181.

26) 본문에서 특별한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내용은 모두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에서 것이다.

술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우선 다양한 투쟁 당사자들의 주관적 평가 내용들을 통해서 인천5.3항쟁과 6월항쟁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자대투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쟁 당사자들의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여 논증 가능한 평가로 재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는 중간발표회 이후의 과제이다.)

2. 인천5.3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관련성

1) 5.3항쟁의 영향을 부정 또는 저평가하는 견해

그렇다고 해서 87년 6월항쟁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의 민주적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하는 것을 ‘5.3이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87년 6월항쟁의 경우는 박종철 고문치사가 결정적인 거였죠. ... 저는 5.3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저는 반성을 이끌어 내는 영향이라면 그걸 영향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6월항쟁과의 연결점은 크지 않다고 봐요.(유종순·이지호 증언, 346-347쪽)

5.3이후에 인천에서 자생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지역 어른들을 모아내지 못한 거예요. 연합단체의 장을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1년 후에 6월항쟁이 다가오면서 인천에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천만 유일하게 못 만들었다구요. 5.3의 영향이에요.(권병기 증언, 104쪽)

전 5.3이 전적으로 6월항쟁으로 이어진 도화선 내지 모태가 됐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한마디로 5.3은 자체만으로 실패한 집회였다고 생각해요.(정성렬 증언, 426쪽)

어떤 사람들은 ‘5.3으로 인해서 6월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인천 5.3이 인천시민 전체의 쫓겨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 조직 활동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상당수가 모여서 ‘이 사람들만의 큰 사건이었다.’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죠.(호인수 증언, 445쪽)

(5.3항쟁이 전체 운동에) 별로 큰 영향은 없어요. 수십년 동안 집회를 봐왔잖아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거 같아요. 87년도까지만 해도 감동이 있었어요. ... 사실 5.3 이전의 대중들의 열기 속에서 얻은 게 컸어요. 그러한 대중열기를 5.3때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 대중의 열기를 살리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다만 운동하시는 분들의 자기 드러냄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죠 ... 당시는 전체를 읽을 만한 지혜, 눈이 부족했던 거죠. 잘못했다기보다 한계를 드러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5.3 결과로 생긴 게 없잖아요. 다들 원위치로 돌아갔지.(황선진 증언, 453-454쪽)

2) 5.3항쟁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가두를 장악하고 당시 우리 전투력의 최대치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지요. 5.3항쟁으로 대규모 가두시위의 경험을 했고, 이때의 성과와 비판을 바탕으로 6월항쟁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든 겁니다.(서동석 증언, 299쪽)

5.3민중항쟁 때는 편차가 컸지만 1년 동안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이 의견도 좁혀지고 대중이 원하는 수준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인천 항쟁의 쓰라린 경험이 운동 상층부의 반성을 가져왔다고 봐요. ... 굳이 비유하자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3항쟁은 87년 민주화과정을 위한 진통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한 번 다지면서 갈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했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수렴하고 가치를 쳐 낼 건 쳐 내면서 제대로 방향 감각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굳이 비유하자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3항쟁은 87년 민주화과정을 위한 진통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 인천5.3항쟁은 이론 투쟁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론 투쟁의 현장에서 정리가 되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고 87년의 민주화투쟁을 이끌어내게 되었다.(김성복 증언, 151-153쪽)

5.3은 서울까지의 마무리죠. 인천이 마무리죠. 디딤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예요. ... 5.3항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련의 부산 개헌 현판식과 군정종식, 민주화운동, 직선제 개헌 요구 투쟁이 ... 대구집회에서부터 신민당 집회가 재야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결합한 거고 그것의 위력이 광주에서 폭발적으로 보인 거죠. ... 일련의 직선제 요구 투쟁의 정점이었죠. ... 6.10이 그걸 갖다가 최고 정점에 올린 거고. 5.3때 거기까지 갔다가 그 주체들이 수배 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폭 하고 꺼지는 거죠, 6.10까지. 그랬다가 폭발하는 거죠.(박계동 증언, 207쪽)

80년 이후 대중적으로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표출된 게 5.3이었다고 봐요. ... 운동의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 ‘5.3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 자체가 재야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한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운동을 선도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 자기 위주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죠. ... 학습 커리큘럼에서 계급 분석을 하잖아요. ... 그런 분석에 따르면 민통련 같은 경우는 소시민운동이 되는 거죠. 뿌피브르조아층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 운동의 맹아들이 커져 가면서 대중 쪽으로 좀더 운동의 역량이 확산된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연계될지는 모르겠지만 87년 6월항쟁이나 노동자대투쟁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평가해요.(김수영 증언, 157-158, 161-162, 164쪽)

3. 인천5.3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관련성

1) 참가한 노동운동가로서의 평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87년 6월항쟁이 그나마 5월 투쟁을 잘못된 걸 기반으로 해서 더 나아간 거였어요. ... 지금 생각하면 역으로 직선제 개헌만 얘기해서 우리가 남은 게 뭐 있어요. 노동과 관련된 어떤 법도 직선제 하나 빼놓고는 다 환원시켜 버렸잖아요. ... 5.3투쟁에서 인노련이 삼민헌법이나 그런 약간 노동자 현실에 맞지 않는 과격한 걸 보여주긴 했어도 그나마 노동자들이 대거 진출해서 나오고, 물론 학출인 활동가들이 많이 그 속에도 끼어 있기는 했지만, 선진 노동자들도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특히 인천에서는 어마어마했죠.(김지선 증언, 181-182쪽)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자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인노련이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노조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긴 해도 현장하고 연결지으려는 노력은 계속 했어요. 5.3때도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가볍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노조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노동조합 간 부라든지 활동가들 있잖아요. ... 그런 선을 통해서 몇 명 데리고 오게 하는 정도였죠.(박육남 증언, 215-216쪽)

노조활동을 뛰어넘는 대규모 정치투쟁에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이 나섰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회전체적인 정치투쟁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데 깊은 의미를 두었어요. ... 5.3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민주투쟁으로 발전해 가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 87년 7, 8, 9월 노동자대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민주노조 인정과 같은 대정부투쟁의 성격도 있어서 단순히 임금인상과 노조결성 요구를 넘어선 민주노조 설립과 같은 정치적 투쟁과 성과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봐요.(정동근 증언, 417-419쪽)

2) 다른 영역의 활동가로서의 평가

5.3을 거치니까 이미 노동운동의 진진이라는 게 개별공장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급격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윤인중 증언, 297쪽)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구성비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단적으로 5.3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60% 정도가 현장에 있던 분들이었어요. 인노련 쪽이든 어디든 대부분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었어요. 그중에 한 20%가 학생이었던 것 같구요. ... 처음 배운 거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 거의 매일 이슈파이팅을 하고 사건만 일어나면 단식하고 그랬어요.(김수영 증언, 163-164쪽)

3) 정치조직 활동가로서의 평가

이미 85년 말에 문건이 나오면서 정파적 입장에 따른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 분위기에서 5.3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3때 다양한 정파의 혁명적 주장들이 대두하게 된 거예요. 주사그룹, 인민노회, 인민노련 등이 노동판을 만들면서 이후에는 노조를 만드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그게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5.3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권오광 증언, 117쪽)

정말, 노동자들이 산업 역군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학생운동 쪽에서 들어간 변혁지향적인 세력들과 만나면서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들도 정치적인 욕구를 말할 수 있고 그걸 갖고 투쟁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을 쌓는 계기였죠. ... 내용적으로는 인천이라는 노동운동의 한 진원지에서 노동자들이 그런 경험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사건이었죠. ... 훨씬 더 중요하고 뜨거웠고 노동자가 세력화될 수 있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는 5.3 이후 노조 결성으로 이어져 간 경험들이었어요. ... 5.3은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에 불을 지피는 가능성, 노동자 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인천지역에서 벌어졌던 시위 중에 노동자들이 상당 규모로 참여하고 그런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 거는 아마 드물고 새로웠던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이현경 증언, 378-379쪽)

4. 결론

인천5.3항쟁 당시의 '한계'가 시대적인 한계이자 주체 역량의 상 극복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는 평가가 많다. 1980년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도 점차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년 5월 당시에 보여주었던 운동 진영의 한계 또는 과오는 깊게 성찰되어야 한다는 것이 투쟁 당사자들 다수의 생각이었다.

인천5.3항쟁이 신민당 개헌운동 현판식을 매개로 전국 주요 도시를 거치면서 준비된 것이지만 '그날 그렇게' 투쟁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된 투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87년 6월 항쟁 역시 주최 단체들이 있었지만 6.10 대회 당일에도 그것이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6월 항쟁으로 변저 나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급박한 정국 속에서 사후적으로 역사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천 5.3항쟁 속에서 나오는 폭력 시위의 양상은 87년 6월 항쟁 때의 시위 양상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한국민주화운동사3』에서 그려지는 87년 6월 항쟁 내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

- 6월10일: 서울 퇴계로 2가 파출소 점거, 전경 20여명 무장 해제; 부산 전경 1개 소대 무장 해제, 전경 차량 한 대 탈취, 민정당사 세 곳 공격 당함 등등 전국 16개 파출소 파손, 경찰차량

6대 전소, 17대 파손

- 6월16일: '최루탄 추방 국민결의의 날' 대회, 부산, 대전, 진주 등지에서 경찰버스 파출소 등 방화 및 파손, KBS대전총국 파손 등등 전국 8개 도시에서 파출소 7개소, 검문소 3개소, 지서 3개소가 습격당하고 파출소 1개소 화재. 경찰 트럭, 오토바이, 버스 등 네 대가 불타고 한 대가 파손, 민정당 지구당사 세 곳에 화염병이 투척.
- 6월 18일: 전국에서 파출소 21개소, 경찰차량 13대가 불타거나 파손.

이러한 폭력 시위 양상과 피해 상황을 보면 86년 인천5.3항쟁 당시의 상황이 오히려 소극적인 투쟁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사태'와 '소요', '분열'과 '과격'이라는 표현 속에서 규정되어 온 5.3항쟁을, 86년부터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비교사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대적 맥락'이라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교사라는 건 우리 내부에서의 정리예요. ... 5.3이 과격한 게 있긴 했지만 전두환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큰 흐름은 같이 하죠. 그런데 이게 억압에 눌려서 극단적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억압 당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이우재 증언, 335쪽)

80년대 초반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세상의 운동이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혁명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가 문제였지요. ... 5.3항쟁에서는 설익은 온갖 이론들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게 다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아마도 당시는 사상의 자유가 막 발화되는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신순봉 증언, 242-243쪽, 246쪽)

또한 인천5.3민주항쟁을 정치적 내용이나 투쟁의 전략전술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영감을 포착하여 문화정치론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증언 내용들에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독재 정권에 대한 유인물 이외에도 '미제 물러나라.' 이런 구호가 담긴 인쇄물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신선했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 구호로 외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집단에서 유인물을 집회 대열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무지하게 뿌리고 다녀서 전단지 길에 완전히 깔렸죠. 그대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방팔방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몰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성효숙 증언, 235쪽)

내 5.3에 대한 기억은 그거예요. 다음 날 방송, 신문을 보니까 난리가 나 있던데, 이상하게도 어떤 축제 같다는 생각이 철딱서니 없이 들더라구요. 그동안 짝 막혔던 것들이 인천에서 터지는구나, 하는. ... 그날이 축제 같다고 생각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내재화되어 있던 것이 다 나왔다는 점에서 축제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5.3을 민주화운동이라고만 보면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 6월 항쟁의 대승리를 끌어 온 데에는 5.3항쟁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최원식 증언, 431쪽)

이 글에서 인용된 내용들은 인천5.3항쟁과 6월 항쟁, 그리고 노동자대투쟁의 관계에 평가하는 내용이지만 증언록 제작 당시에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예산의 한계 속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펴낸 인천5.3항쟁 증언록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2016)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사료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증언 내용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논거를 확인하고, 여러 주장들을 체계화하고, 다른 문헌 자료들과 비교하여,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발표3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기록의 체계적인 아카이빙 방안

손동유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1. 서론

아카이브(archives)란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또한, 가치 있는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장소, 기관, 기구)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단어이다. 가치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유용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역사적,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정보적 가치 등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잘 보존, 관리하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건 관련 기록의 경우 사건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것을 아카이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물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으려면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의 3요소라고 한다. ‘내용’이란 기록에 담겨 있는 문자, 숫자,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말한다. ‘구조’란 기록의 내용을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적 양식이다. ‘맥락’은 기록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환경과 정황 및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정보 등을 뜻한다. 획득한 모든 기록은 이렇게 내용, 구조, 맥락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아카이빙이란 관련 기록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정리, 분류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며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인천 5.3 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록물 획득(수집, 이관 등), 정리/분류,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한 연구 및 대중적 보급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2006년에 개최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학술토론회(조현연, 조희연 발표) 이전까지는 연구성과가 거의 없었고, 이후 김영곤(2007), 이준한(2014), 서중석(2016), 최종훈(2020), 김창수(2021) 등의 연구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천 5.3 민주항쟁을 6월 항쟁과 관계에서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이준한 2014)와 대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서중석 2016)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차원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분석한 논문(김영곤 2007, 조희연 2006)과 사례 자체를 충실하게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논문(최종훈 2020, 김창수 2021) 등이 있다. 하지만 인천5.3민주항쟁을 전체 민주화운동, 특히 1985년부터 시작된 ‘개헌운동’의 전개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다.²⁷⁾

이 같은 기존 연구현황은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기록의 부재는 연구의 빈곤을 낳기 때문이다. 기록물의 양적 확보와 질적 확보의 두 측면이 모두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7) 김창수 외, “인천 5.3민주항쟁 기초 조사 보고서” 참고

2. 기록물의 분포 현황 및 획득 방안

아카이빙 공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대상기록을 확보 및 획득 하는 부분 - 기록을 관리하는 부분 - 활용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기록의 획득이란 ‘개인 및 단체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취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인천 5.3민주항쟁 기초 조사 보고서”를 통해 관련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5.3항쟁 참가자 증언, 5.3 참가자 증언 분석, 「문익환 공소장」(서울지방검찰청, 1986.6.19.), 인천5.3민주항쟁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자료,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경찰 측 자료 그리고 신문자료를 조사하였다.

인천 5.3민주항쟁이라는 사건이 갖는 특성상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주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 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성과를 계승하는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록물은 소장자와 소장 상황에 따라 수집, 기증, 이관, 대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획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장현황과 목록 정도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기증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맥락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기록의 경우 면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의 생산, 분포, 소장 현황에 대한 파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 소장처(lead file) 및 접촉정보(case file)의 생성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록물 획득에 있어서 효율을 높여줄 것이다.

즉, 관련 정당, 재야 민주화운동조직, 노동운동조직, 학생운동조직,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소장 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²⁸), 국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종교, 경찰, 법원, 언론사(영상자료 조사를 위해 방송국 필수조사), 관련인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잠재적 소장처 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을 시 샘플조사를 통해 잠재적 소장처 및 접촉정보 구축의 전형은 반드시 마련하고자 한다.

기록물의 소장정보와 소장자의 기증의사가 확인되면 수집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저작권, 소유권의 이전 등에 있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필수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과정의 서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한편, 잠재적 소장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수집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천 5.3민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한시적인 공모전 형태, 지속적인 수집 창구 개설 등 수집주체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물 획득과정의 모든 행위 또한 기록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복작업을 줄이며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구결과에서 완결성 있는 서식을 제시할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 간략히 예를 들면 아래의 표와 같다.

28) 국가기록원에서는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되었던 것을 비공개 연한이 경과하면 ‘공개재분류’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인천지방경찰청이 생산한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위보고>, <수사지휘품신> 등의 기록물 건을 공개한 바 있다.

요소		기술방법
기본정보	수집활동명	- 수집활동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간결하게 기술 - 접촉한 개인, 단체, 기관 등의 명칭과 수집활동, 차수를 기술 예) 1차 ○○마을공동체 소장기록 이관
	생산자	기록을 생산한 기관, 단체, 개인의 명칭을 기술
	입수처	기록을 입수한 기관, 단체, 개인의 명칭을 기술
수집정보	접촉활동명	- 접촉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기술 예) ○○마을공동체 소장기록 이관
	수집활동구분	- 기록의 수집한 방법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술 - 이관, 기증, 위탁, 구매, 대여, 사본 제작 후 반환 중 선택하여 기술
	수집담당자	기록을 수집한 담당자명을 기술
	수집기간	- 기록수집활동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술 - 수집일자를 아라비아숫자 8자리(YYYYMMDD)로 기술
	비고	수집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기술
수집기록	상자번호	- 수집이 완료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수집상자 번호를 기술 - Container의 이니셜 'C' + 년도 + 일련번호 형식으로 기술 예) C-2013-1
	위치정보	- 수집한 기록의 위치정보 기술 예) 1 수장고 - 12 캐비닛 - 00열 - 00단
	수집내역/비고	- 수집상자에 있는 기록의 형태별 수량을 기술 예) 문서 000철, 사진 00매, 박물류 00건

3. 정리/분류/디스크립션

정리는 기록물을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면서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 물리적 처리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기록물을 분류하고 기술(description)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정리란 물리적인 조직화의 의미이고, 분류란 논리적인 조직화를 의미하지만 정리의 개념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이른바 ‘사건 아카이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산주체, 출처, 시기, 기록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되 사건 아카이빙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기술이란 기록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생산맥락), 기록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내용과 구조),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열람조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관리이력), 이와 관련된 다른 기록물이 무엇이 있는지(관련기록)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서술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장기록에 대한 최상의 검색도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아카이빙 프로세스 중 기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아카이빙 전문가 진영에서는 국제표준(ISAD(G))을 마련한 바 있고, 여러 나라에서 그 내용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들여와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5.3민주항쟁’ 정리 및 디스크립션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서식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작성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4. 5.3 민주항쟁 아카이빙을 위한 로드맵

‘인천 5.3 민주항쟁 아카이빙’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서비스 방안에 제시되어야 한다. 관련 기록물이 학술연구자들에 의한 연구에만 활용된다면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를 대중적으로 충분히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관련 기록을 활용하려면 기록물을 원상태 그대로 열람하는 방법도 있고,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책자, 화보집, 다큐멘터리, 교육자료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방법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유관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의 사례 벤치마킹하여 서비스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카이빙 체계는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인력, 자원,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동원하여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 5.3 민주항쟁 아카이빙의 3~5년간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시적인 아카이빙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카이빙 업무의 선후관계를 정립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자리매김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과정에서 ‘왜 5.3 민주항쟁이 인천에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을 것이다. 즉, 지역성을 잃지 않는 아카이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 5.3 민주항쟁’ 기록은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바이다. 관련 인사가 활동하고 있고,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인천 5.3 민주항쟁’은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4

인천5.3민주항쟁 참가단체들의 정치적 특성

- 운동사적 맥락에서의 유인물 분석

윤영상 (신한대학교 객원 연구위원)

1. 서론

1986년 5.3 인천항쟁이 일어난 지 36년이 흘렀다. 1년 뒤 벌어진 6월 항쟁은 직선제개헌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소위 87년체제가 성립되어 35년이 지났다. 소위 형식적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정권교체도 몇 차례 이루어졌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나타날 때마다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의 촛불은 한국사회 변화와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정치적, 제도적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주체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듯이, 2017년 촛불시민들의 의사도 정치적으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제도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던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그 성과는 전유되었다. 그 만큼 낡은 유산도 많이 남아 있었고, 반영되지 않은 목소리는 다시 미래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현실은 바뀌어 왔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전환점을 돌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건들이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었다. 제도적 타협은 이익의 타협을 의미했고, 그 타협의 골을 채워내는 시민참여의 반복은 한국 정치사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어 왔다.

1) 연구 목적

1986년 5.3인천항쟁의 특별함은 무엇보다 주장과 목소리의 다양성에 있다. 물론 1980년 이후 수도권에서 벌어진 최대의 시위라는 양적 지표가 갖는 무게감도 있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요소가 결합된 효과는 당시 전두환정부와 제1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자극을 주었다. 전두환정부는 참가자 체포, 구속, 수배를 통해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나섰고, 신한민주당은 개헌운동과정에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민통련, 민청련, 서노련과 인노련, 자민투와 민민투 같은 학생운동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직접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다수가 체포되거나 수배되면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보수언론은 그들을 좌경용공폭력세력으로 매도하고 낙인찍는 분위기에서 활동의 지속과 대중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각 운동단체들은 항쟁의 성과와 한계를 둘러 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5.3항쟁에서 나타난 주장과 목소리의 다양성에 주목한다. 특히 다수의 참가자들이 '미제국주의'란 단어와 '미제축출'이라는 구호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상황과 신한민주당에 대한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정치적 배경과 문제의식에 주목하면서, 그 시대적 의미, 참가집단들간의 차이 등을 규명하려고 한다. 물론 그런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가 87년 6월항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큰 흐름을 잡는 것으로 제한한다.

1986년 5.3항쟁에서 나타난 다양한 목소리는 1987년 6월항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발전하거나 사라져갔다. 그렇지만 민주화이후에도

제도정치권의 역할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들이 있고, 여전히 제도권밖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5.3항쟁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만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갈등양상들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유인물의 개념

원래 유인물(油印物)이라는 단어는 등사기를 사용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말로, 등사기를 이용해서 만든 인쇄물을 뜻한다. 그런데 요즘은 등사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쇄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통해서 출력한 인쇄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사기, 인쇄기, 프린터 따위를 이용하여 만든 인쇄물"로 정의되어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유인물 대신 인쇄물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는 유인물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인물로 통일하고, 인쇄물이라는 단어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86년 5.3항쟁 당시에 배포되었던 유인물 분석에 초점을 둔다. 당시 40-50종이 넘는 유인물 수십만장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용된 유인물의 종류는 행사를 안내하는 안내전단, 타자기로 쳐서 등사한 성명서와 전단, 10쪽내외의 소책자, 타자기, 손글씨, 활자를 사용한 신문 등을 포함한다. 경찰청에서 작성한 당시 유인물 분석자료에는 38종의 유인물을 적시되어 있다.²⁹⁾ 그렇지만 모든 유인물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제목과 주요 내용만 있지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유인물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당시 항쟁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유인물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면 신한민주당계열에서도 여러 유인물이 있고, 민통련과 그 산하단체의 유인물도 아주 다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생단체나 노동단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³⁰⁾ 그래서 당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유인물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치적 주장과 의미가 다른 유인물들을 크게 신한민주당, 민통련, 서노련과 인노련을 비롯한 노동단체, 자민투와 민민투를 포함한 학생단체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속에서 정치적 주장의 특색에 따라 10여종의 유인물을 선택해서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상당수의 소규모 비합법 노동단체와 학생단체들이 저마다 새로운 노선과 이념을 모색하면서 5.3항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입장을 담은 유인물이 많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참여해서 배포했던 유인물은 경찰의 유인물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³¹⁾ 물론 그 경우에도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주

29)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5.3종합수사보고 19」, 1986. 관리번호 DA1432050.

30) 5.3항쟁 당시에 80년 광주에서 편의대가 활동했던 것처럼 시위대의 과격한 주장과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경찰과 보안사 등이 개입했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일부 유인물의 경우 당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사용하지 않은 말투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의심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무관한 과격하고 생소한 유인물은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다.

31) 당시 본 연구자는 나중에 반제동맹당으로 명명되어진 그룹의 초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유인

장이나 내용을 담은 다른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속에서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³²⁾

일단 본 연구가 정치적 주장의 다양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는 당시 현장에 서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운동사적 맥락이 필요할 경우 5.3항쟁 이전의 유인물이나 이후의 유인물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밝혀 둔다. 5.3항쟁을 둘러싼 논쟁이 87년 6월항쟁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는 맥락에서이다. 그렇지만 5.3항쟁때 나타난 다양한 주의주장이 어떻게 변화되어갔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87년 12월 대선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소위 비판적지지, 후보단일화, 독자후보론은 5.3항쟁의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도했던 인물들의 인생궤적은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흥미를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본 연구의 중심대상은 아니다.

4) 선행연구

5.3항쟁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을 기록하고, 재해석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연구시각의 제약과 기억의 한계, 자료의 한계속에서 일정정도 지체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접근은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본 연구는 5.3항쟁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속에서 다양한 주의주장에 대한 여러 해석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준한³³⁾, 이우재³⁴⁾, 김영근³⁵⁾, 서중석³⁶⁾, 최종훈³⁷⁾ 이재성³⁸⁾의 연구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성과들을 계승하되, 제1야당과 민통련, 서인노, 종교단체, 학생단체 등의 다양한 주장의 스펙트럼에 초점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그런 다양한 주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하나의 흐름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또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의 세력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한다.

물을 배포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지만 당시 플래카드 구호나 유인물의 제목은 재판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실물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와 유사한 사례도 많을 것이다.

32) 당시 본 연구자가 속해 있던 노동단체는 당시 ‘민족민중혁명론(NPR)’의 입장이었는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과정에서 입장이 바뀌고,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33) 이준한,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인천학 연구』 21(2014)

34) 이우재, “5·3에서 미래로: 5·3인천사태를 되돌아보며,”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2006)

35) 김영근,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인천학 연구』 6(2007)

36) 서중석, “인천 5·3사태 평가-대중성과 군부독재 타도문제를 중심으로,” 『인천 5·3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2016)

37) 최종훈, “1986년 인천 5·3 항쟁의 전개와 의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0)

38) 이재성,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자료해제 및 향후 과제,” 『인천 5·3 민주항쟁 학술토론회』(2021)

2. 5.3 인천민주항쟁 개괄과 현장 유인물 분석틀

1) 5.3 인천 민주항쟁 직전의 상황

-86년 2월 12일 신민당의 1000만명 개헌서명운동 돌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회에서 10만명이상이 넘는 대규모 군중이 참여)

-신민당과 민주협, 민통련 등간에 '민주화를 위한 연락기구'(민국련) 구성

-4월 28일 서울대생 김세호-이재호 분신사건

-4월 29일 민국련 기자회견(이민우, 김대중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4월 30일 청와대 회담에서의 정치적 타협과 전두환 발언(이원집정부제 논란의 계기)

* 노동운동의 성장

-1985년 6월 구로동맹파업

-1985년 8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1986년 2월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결성

* 학생운동의 발전

-1985년 4월 전국학생총연합 출범, 산하기구로 삼민투 설치

-1985년 5월 23일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1985년 말 학생운동내에서 민족민주혁명론(NDR)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간의 논쟁 확대, 1986년 민민투, 자민투 결성으로 이어짐

2) 5.3항쟁 개괄

1986년 5.3 인천민주항쟁은 원래 신한민주당의 개헌서명운동 인천현판식으로 계획되었다. 당시 개헌운동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려던 민통련은 신한민주당의 타협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독재타도만이 아니라 미국문제, 노동문제를 비타협적으로 제기하려던 서노련등 노동단체와 함께 독자집회를 준비했다. 당시 민통련과 서노련등 노동단체들은 집회를 공동주최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구상과 방법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러 비합법적 노동단체들과 자민투, 민민투 등의 학생운동 단체들이 합류하고, 경찰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위진압작전이 진행되면서, 당시 집회를 주도하고 계획했던 단체들조차 생각지 못했던 상황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3) 5.3 항쟁 참여단체들의 구분

-5.3인천민주항쟁에 참여한 세력은 크게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 지지자들, 민통련과 참가단체

들, 서노련-인노련 등 노동운동단체들, 자민투-민민투 등 다양한 학생운동 단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주요단체	인원 (명)	비고
재야	민통련(전국지역협,민청련), 인사연	1,000	
노동자	인노련, JOC,기노련,서노련 등 수도권 노동자	3,000	
학생	민민학련(민민투), 자민투	4,000	
정당	신한민주당 당원	2,000	
시민	인천시민 (당시 남구, 중구 구민 중심), 철거민	40,000	
소계		50,000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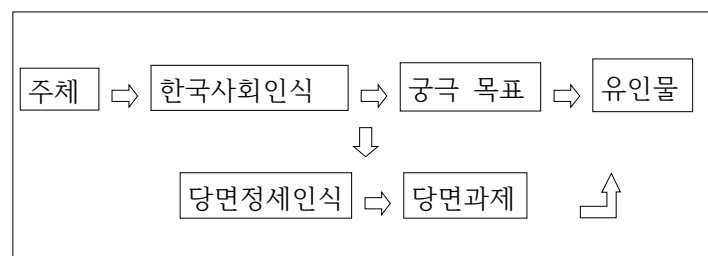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인천 5.3민주항쟁 기초조사보고서」 33쪽

-특히 1985년이후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내에서 전개된 격렬한 사상투쟁, 이론투쟁을 반영하여 다양한 비합법적 운동단체들도 학생운동단체 및 노동운동단체들이 주도하는 시위대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그들의 주의 주장은 그들이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3인천민주항쟁 참여단체들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5.3투쟁을 평가하면서 87년 6월항쟁 및 7.8월 대투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흐름은 이후 김대중비판적지지, 후보단일화, 독자후보론으로 분화발전한다.

4) 유인물 분석의 틀

유인물 분석은 기본적으로 참여단체들의 정치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참여단체들의 정치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주장과 구호,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과 궁극목표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한다.



-한국사회인식과 궁극목표에서는 한국사회의 성격과 미국과의 관계문제, 군사독재의 위상과 성격규정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소위 '미제축출 파쇼타도' 슬로건에 대한 참가단체들의 인식을 도출한다.

-당면정세인식과 당면과제는 개헌문제를 둘러싼 당면정세의 성격을 각 주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드러내면서, 신한민주당에 대한 태도 및 당면 투쟁에의 개입목표와 과제를 둘러싼 입장차이를 규명한다. 특히 이 문제는 분열된 운동세력의 통일, 단결문제를 대중운동의 확대, 승리로 이끌어 내기 위한 태도와 사고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집중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유인물 분석

1) 유인물 분석 1(신한민주당 계열)

-신민당의 유인물과 전단들도 있었으나 주장이 명료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2) 유인물 분석 2(민통련 계열)

--민통련과 참가단체들의 유인물의 정세인식과 주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민통련, 인사연의 유인물 분석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민청련은 민통련 산하조직이지만 주장의 특성이나 영향력이 민통련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한다.

3) 유인물 분석 3(노동단체)

-서노련, 인노련, 인기노련은 공동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5.3 노동자회와 반제반파쇼노동자들의 유인물을 분석한다. 그 외 단체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후 자료가 확인되면 추가 분석한다.

4) 유인물 분석 4(학생단체)

-자민투계열-해방선언(민통련지지-반제 직투론과 구별)

-민민투계열-민족민주선언, 민민학련, 민민투

-민중민주학우일동은 소위 pd계열 학생단체의 문건으로 보임

5) 주장 요약 구분

	신한민주당비판	개헌문제	미국문제	독재정권	
신한민주당		직선제개헌	독재지원반대 민주지원 찬성	선거를 통한 극복	
민통련	비판	직선제 개헌 민주헌법	미국비판	독재타도, 민주정부	
서인노	비판	삼민헌법	미국비판, 미국축출	독재(삼반정권) 타도 삼민정부	
자민투	비판	직선제개헌	미제축출	파쇼타도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인식
민민투	비판	민족민주헌법, 헌법제정민중회의	미제축출	파쇼타도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인식

4. 5.3항쟁 이후의 민주화운동 흐름과 6월항쟁

전두환정권은 이 사태를 폭력시위 소요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민중운동 탄압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을 분열, 체제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였다. 신한민주당은 반미, 폭력시위와 선을 그으면서도 개헌운동의 지속과 반독재운동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통련등 재야단체들은 점점 급진화되고 있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운동주도권을 확립하려 했고, 서인노 등 당시 부상하고 있던 노동단체들은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대오를 보위하면서 독자적인 운동흐름을 유지하려 했다. 자민투, 민민투 등의 학생운동단체들과 다양한 노동단체들은 5.3인천민주항쟁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대중투쟁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둘러싼 논쟁과 모색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5.3인천민주항쟁이후 신한민주당, 민통련등 재야단체, 그리고 학생단체와 노동단체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흐름을 유지하면서 각 단체의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집결하기 시작한다. 6월항쟁은 그런 의식적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로 역사의 한 장을 일궈낸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6월항쟁에 뒤이어 진행되는 상황도 의미심장하다. 노동자들의 대중적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통련의 역할에 주목한다. 국본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민통련이 담당했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통련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무엇보다 신한민주당의 양대 계파(양김씨)가 갖는 대중적 영향력을 제어하지는 못하는데서 확인된다. 동시에 국본에 참여하거나 그 흐름을 활용하면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확보하려는 학생단체와 노동단체들을 통합할 정도의 리더십을 구축하지도 못한다. 그 결과 신한민주당의 분열과 양김씨의 대선출마 상황은 현실이 되고, 6월항쟁의 결과물은 역설적으로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가 민주항쟁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국본에 참여했던 신한민주당 밖의 민주화운동세력은 비판적지지, 후보단일화, 독자후보노선으로 분화된다.

이 당시 나타났던 신한민주당, 민통련, 서인노 및 학생운동단체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는 민주화이후의 한국정치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의 변화발전과정, 독자적인 진보정당건설운동의 본격화와 분화, 그리고 전통적인 민중운동만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운동의 존재, 그리고 역사적 고비마다 새롭게 분출하는 촛불항쟁의 힘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환한다. 현재는 과거와 다르지만, 무관하지 않다. 과거의 축적물 위에 현재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미래가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5. 나가는 말

0. 요약

0. 함의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5.3항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87년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치세력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뚜렷하게 양당제적 흐름으로 고착되어 왔다. 현재의 국힘과 민주당과 같이 양당제를 구축하는 있는 정당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의미있는 분석의 과제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그런 양당제적 흐름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군소정당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현실적이다. 과연 양당제는 불가피한 현실인가, 아니면 바뀌어야 할 대상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현실적 쟁점이다. 그러나 양당제냐 다당제냐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고민과 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당과 집단의 시각을 벗어난 접근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5.3항쟁 당시 참가주체들의 한국사회인식을 둘러싼 논란과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비교, 검증하는 것도 나름 의미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격, 미국에 대한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지만, 1986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혁명의 개념과 가능성문제를 둘러싸고,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도권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의 한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가교역할을 하는 정당과 단체들도 많아졌지만, 고통받고 소외받는 소수파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여전하다.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 목소리의 발화과정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떠돌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1986년 5.3항쟁으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이념과 주장은 달라졌어도 5.3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종합토론1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5.3민주항쟁에 대한 일간지의 기사문 분석

* 1쪽 주2: 인화공사 -> 인하공사?

* 4쪽: 개헌투쟁 전선의 균열은 당시 신민당의 타협적 태도와 이민우의 좌익배제 발언 등으로 더 격화된 면이 있으나, 이미 그 이전부터 헌법의 내용을 놓고 민통련의 민주헌법과 서인노련의 삼민헌법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운동의 해계모니를 놓고 서인노련이 민통련을 재야 명망가 소부르조아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거기에 학생운동진영 내에서 자민투와 민민투가 대립하면서 설사 신민당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이민우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날의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개헌투쟁전선의 균열은 신민당과 같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선의 분열이라는 내재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 13쪽: 신문사별 보도지침 이행 분석표의 이행을 난의 4, 5는 무엇을 근거로 나온 숫자인지?

* 14쪽: 대전, 대구, 청주의 경우 그 지역의 민통련 조직이 신민당의 현판식과 별도로 가두시위를 조직하였음. 3월 30일 광주 현판식 상황을 전청련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민통련 지역운동협의회가 이후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을 결의함. 대전, 대구, 청주의 경우 아직 수도권의 노선 분열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비교적 통일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할 수 있었음.

5.3항쟁 참가단체들의 정치적 특성 분석

* 4쪽: 민통련과 인사연이 공동집회를 위해 서인노련과 접촉을 가지려 했으나 서인노련이 소부르조아 집단이라며 접촉 자체를 거부함. 5월 3일 현장에서도 장기표가 김문수를 만나 공동집회를 갖기로 합의하고 서인노련 시위대를 맞이하기 위해 길을 열어 주었으나 서인노련 시위대는 그냥 통과하고 말았음.

* 5쪽: 당시 유행했던 사회구성체론을 참고할 필요 있음.

* 6쪽: 민청련은 민통련 산하조직이 아니었음.

자민투계열이 민통련을 지지한 적 없음.

그리고 민통련과 자민투가 명시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한 적 없음.

* 7쪽: 운동진영이 국본으로 집결하게 된 데는 5.3 이후 널리 퍼진 강철서신의 대동단결론의 영향이 컸음.

인천5.3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 그리고 노동자대투쟁

*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과정이 일직선은 아님. 누구도 그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것임. 즉 한 번의 실패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다 또 실패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하는 끝없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실행을 거치면서 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것임. 5.3에서 보인 우리 운동권의 급진적, 좌경적 오류는 80년 광주의 실패에 대한 자기반성의 결과였고, 5.3의 좌절에 대한 자기반성이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6월 항쟁에 대한 아쉬움이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진 것임. 이런 맥락의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음.

종합토론2

김영철 (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

1. 개인사와 시대사

개인적으로 1986년 5.3 항쟁 현장에 있었다. 항쟁이 고조되자 주안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최류탄이 난무하여 나중에는 최류탄이 날라와도 발로 툭툭 차버렸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서울에서 교회의 전도사로 있었는데 기독교사회운동 단체(민통련소속)의 부름에 따라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5.3 민주항쟁에의 참여는 내겐 인천지역으로의 복귀의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인 1987년에는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EYC)의 회장으로 87년 민주화대투쟁에 적극 참여하다가 구속되었다. 그 뒤에 소속 교단의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주관하는 현장목회훈련(10개월의 공장생활과 민중목회훈련)을 마치고 서인천지역에 고백교회를 세우고 10년 동안 민중교회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개인사와 시대사는 연관이 된다. 당시에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는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 군사독재타도와 민중해방을 위한 시대적 고민은 비슷했다. 그래서 요즈음 민주화운동사를 정리하는 트렌드가 그렇지만 개인적 참여의 다양한 스토리들이 시대사의 정리와 함께 필요하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의 삶의 궤적에서도 1986년 5.3항쟁과 1987년의 민주화대투쟁 그리고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이 나뉘어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2. 5.3민주항쟁의 평가에 대하여

이재성선생의 정리에서 보듯 인천 5.3 민주 항쟁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항쟁에 참여했던 인천지역 여러 인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제시한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 실제로 같이 활동했던 분들도 많아 아무래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것 같다. 이것은 여전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거대한 물줄기에서 인천 5.3항쟁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가에 대한 논란의 일단을 보여준다. 대체로 시민들의 항쟁이었는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는 운동권 조직의 투쟁이었는데 대해서는 후자로 많이 기울어진다. 그러나 비록 야당의 개헌투쟁본부 현판식이라는 정치행사와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대중적 참여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인천 5.3 항쟁이 이전에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의 항쟁과 이어진 결정판 같은 집회였다. 말하자면 5.3 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화를 염원하는 전국적 대중 집회의 매듭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면에서 86년 5.3 항쟁은 87년 6월 항쟁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그런데 인천지역운동 차원에서 보면 앞에서 지적한 5.3항쟁이 인천시민들의 대중적 항쟁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는 인천5.3 항쟁의 폭력성과 연관을 짓는다. 하지만 시위의 과격성은 여러 논자가 지적했듯이 당시 정보기관의 공작과 보도지침에 따른 일방적 보도를 했던 언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많았다. 실제로 5.3 항쟁에서 시위의 과격성은 이어진 87년의 여러 집회와 비교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다. 그보다는 당시의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량의 한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인천지역에는 당시에 수많은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투신했던 곳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장지

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역량을 확장한 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괴리를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5.3 민주항쟁 당시의 유인물 분석이다. 각종 유인물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내용은 운동권 내부에서는 치열한 학습과 토론의 결과이지만 대중에게는 접근하기 어렵고 거리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인사연 활동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로 5.3 이후에 인천에서 자생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내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87년 6월 항쟁에서 인천에서는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지 않는가? 사실 지역의 맞벌이노동자를 위한 탁아소(오늘의 어린이집)와 공부방(오늘의 지역아동센터)은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운동과 결합하려고 시도했던 민중교회목사로서도 일반 교회 대중들과 함께하기 어려움을 느꼈던 한계이기도 했다.

3. 5.3 민주항쟁의 기억과 발전을 위하여

5.3민주항쟁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이를 인천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서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도 이의가 없다. 우선 제도적인 법제화와 센터 건립 문제와 같은 외형적 사업도 필요하다. 5.3 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제화는 이미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5.3 민주항쟁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센터 건립 문제 또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건축에 대한 세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물론 5.3 항쟁의 본거지였던 주안시민회관 자리에서의 건립은 어렵게 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장소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 정비와 함께 5.3 항쟁을 실제로 시민들이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5.3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래포구 5.3km 걷기 행사도 진행되었다. 5.3합창단이 만들어져 매년 발표회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민주합창단과의 교류와 발표회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10월에 전국민주합창축제를 인천에서 열게 되었다. 이렇게 5.3 항쟁을 다양한 인천시민들이 기억하고 참여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5.3 항쟁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돌이켜 보면 5.3 항쟁 참가주체들의 한국사회인식을 위한 다양한 논란은 이후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실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아직도 5.3항쟁의 결과물이기도 한 1987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새로운 체제의 도래를 위한 과도기에 있다. 5.3항쟁에서의 백가쟁명의 정치적 주장들을 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승화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양당제에 갇혀있는 제도 정치의 한계,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운동과 주민자치 교육자치 돌봄마을을 이루는 마을공화국운동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5.3 항쟁의 많은 주역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5.3항쟁 기념사업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EMO



MEMO

